

보도시점 : 배포 즉시 보도 가능 / 배포 : 2023. 4. 20.(목)

저출산 대책은 시대적 과제, 민간·현장 소통으로 체감도 높은 정책 모색

- 20일 저출산·고령화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 주요 정책 방향 논의
- 다각적인 주거 지원 방안,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공간구조 재구성 등 논의
- 정기적 회의 개최와 정책 수요자 소통으로 정책 지속 발굴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4월 20일(목) 오후 ‘저출산 고령화 대응 전문가 자문회의’ 첫 회의를 개최하여 청년·신혼부부·양육·고령가구 등 맞춤형 주거 지원, 이동서비스 고도화 및 교통안전 강화 등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주요 정책 방향을 각 분야 전문가와 논의하였다.
 -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28일(화) 개최되었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국토교통부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자 하는 원 장관의 제안에 따라 개최되었다.
 -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냉정한 분석을 통해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분석”하라고 당부한 만큼,
 - 이번 회의는 인구, 주거·도시, 보건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들과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제언하는 등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전영수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백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우혜경 공주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조승연 연세대 주거복지시스템연구단 선임연구원

- 참석자들은 저출산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되는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 공급,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지원 강화 등 청년, 신혼부부, 자녀 양육가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 방향을 논의하였다.
- 위원들은 인구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공급 정책과 함께 고령층과 젊은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주거 공간 조성 등 다각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이어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에서는 고령 가구 주거 지원, 계층·지역별 이동 사각지대 해소, 안전한 이동 환경 조성 등 고령 친화적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였다.
- 위원들은 스마트시티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고령자 주거 서비스 개선, 교통·문화시설·일자리 등 고령자 정주 여건 개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어서 위원들은 청년들이 전국 어디서나 교육·일자리·인프라 등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특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압축 도시’ 개념을 활용하여 하나의 시설에 여러 서비스가 결합될 수 있도록 공간 구조와 행정 서비스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또한, 위원들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주요 당사자들인 2030 세대, 고령층 등 의견 수렴이 필요함에 공감하며, 세대별 분절적인 접근보다는 모든 세대가 아울러 살 수 있는 공간 조성을 목표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의 정책과 연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와 실무 TF 회의를 정례화하고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여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 아울러,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등 다양한 정책 당사자와의 현장 소통을 병행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 발굴하고, 보편적 이동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교통정책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 원 장관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시대적 과제로, 그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효과 높은 대책을 고심해야만 할 때”라며,

○ “앞으로도 전문가, 정책 당사자인 국민들과의 상시 의견 수렴 창구를 가동하여 의미 있는 정책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책임자	과 장	김배성 (044-201-3201)
	기획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권지현 (044-201-3203)
	주거복지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익진 (044-201-4504)
	주거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강한우 (044-201-4506)
	종합교통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정희 (044-201-3804)
	교통정책총괄과	담당자	서기관	최민석 (044-201-3792)

